

보도설명자료

(’20. 2. 14)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에너지전환과 무관한 국가적
난제로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필요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이며, 사용후핵연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
기간을 길게 늘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한국경제, 2.14
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대한 설명)

- ◇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에너지전환 여부와 무관한 국가적 난제로,
 - 국민적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입니다.
 -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 건의에 따라 “원전 내 저장 시설의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 원전정비 및 가동은 원자력안전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정해지며, “원전 점검·정비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사용후핵연료 배출을 최대한 늦추는 꿈수를 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 2월 14일 한국경제 인터넷판 <핵폐기물 포화 위기와 원전 점검 강화의 수상한 관계>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주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않고 있기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이지만,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일부러 맥스터 증설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옴
- 만약 올해 8월까지 착공하지 못하게 되면, 원전업계에선 “월성원전의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해 사용후핵연료 배출을 최대한 늦추는 꿈수를 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에너지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원전 운영국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난제임
 -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국민적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이며,
 - * 재검토위원회 출범(’19.5) 이후, ’19.8월에 확정된 의견수렴 실행계획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진행중(’19.11~, 그룹별 회의 11회·연석회의 2회 개최, 조만간 국민·지역 의견수렴 착수 예정)
 - *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은 지역실행기구가 ’19.11월에 출범하여 3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재검토위원회와 실행방안을 협의중이며, 향후 주민설명회 등 개최예정
 -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내 저장시설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 원전 정비계획은 원자력안전법령 및 운영기술지침서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한수원이 수립하는 것으로,
 - 사용후핵연료 배출량을 조정할 목적으로 원전의 점검·정비기간을 인위적으로 연장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문의 : 원전환경과 손호영 과장(044-203-5340) / 류재형 사무관(5318)